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금지사항(I)

1 7대 의무사항

① 성실 의무 (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위반 유형

-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소극행정
-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갑질행위, 성비위 관련 또는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산,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물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② 복종의 의무 (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위반 유형

-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

③ 친절·공정의 의무 (법 제5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④ 종교중립의 의무 (법 제59조의2)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소속 장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음

⑤ 비밀 엄수의 의무 (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위반 유형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비공개 자료 등 중요 공문서 무단유출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⑥ 청렴의 의무 (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상하 공무원간에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위반 유형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 * 금품등 수수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감봉" 1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강등" 처분

⑦ 품위 유지의 의무 (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 유형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불건전한 이성교제, 도박, 폭행, 사기, 마약투여 등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금지사항(II)

2 4대 금지사항

① 직장 이탈 금지 (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위반 유형

-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 무단결근 등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법 제64조)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영리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 등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 (영리업무 금지요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금지요건(1 내지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③ 정치 운동의 금지 (법 제65조)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②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③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정치적 행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치적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함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위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등은 금지됨

④ 집단 행위의 금지 (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우정직 공무원은 제외

3 징계 및 벌칙

징계 (법 제78조)

● 이 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하여야 함

* 징계기준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

벌칙 (법 제84조, 제84조의2)

● (정치 운동죄) 3년이하 징역과 3년이하 자격정지

● (집단행위 금지 위반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역사속 청렴 이야기

📖 땅문서를 찢은 평양감사

(조선 말기 실학자 박규수 선생의 일화)



조선말기 문신이자 북학파로 알려진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선생이 평양감사로 떠나고 부인은 그 녹봉을 몇 년 동안 모아 땅을 사두었습니다.



선생은 한양으로 돌아온 후, 땅을 판 주인이 다른사람에게도 이중으로 땅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관리로서 백성과 사사로운 이익을 다투면 안된다고 하며 땅문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청렴 명언

Real integrity is doing the right thing, knowing that nobody's going to know whether you did it or not

진정한 청렴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1954년~)
미국 방송인 겸 사업가>



Corruption is the enemy of development, and of good governance.

It must be got rid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t large must come together to achieve this national objective.

부패는 발전과 좋은 통치의 적이다. 없애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한다.

<프라티바 파틸(1934년~)
제12대 인도 대통령>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 “입원 순서 좀 당겨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위반

□ 국립대 병원이 생산, 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

원무과장C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렴 퀴즈 이벤트

OX 다음 설명하는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를 선택해 주세요.

Q. 주무관 A는 형편이 어려워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이다.

① ○ ② ×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소속 및 성명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2019.11.5.까지
♣ 응모방법: exblue@korea.kr

지난호(7호) 정답은 ②번 × 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을 보내드렸습니다.^^

축! 당첨 박〇〇(본부), 김〇〇(진주지청), 유〇〇(영월 출장소), 김〇〇(광주청), 안〇〇(경기지청) 등 5명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월별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금 각 10만원 지급

2019. 9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영월	지역협력팀	주무관	심경혜
보령	보령고용센터	보안요원	김정웅
서울관악	근로개선지도1과	주무관	정재숙
서울관악	고용관리과	주무관	이금선
울산	고용관리과	사무관	김일섭

2019. 10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보령	지역협력과	주무관	김승주
보령	지역협력과	주무관	이윤후
영월	영월고용센터	주무관	유인경
보령	지역협력과	주무관	최유원